

축산정책방향



최염순
농림부 축산정책과
기술서기관/농학박사

1. 축산업 현황 및 전망

가. 한국 축산업의 위치

- 축산업생산액('04년 10조8,399억원)은 농림업생산액 중 29% 차지
- '95년(5.9조원) 대비 '04년 축산업생산액은 85% 증가
 - 양돈(160%)의 신장세가 두드러지고, 양계(45%), 낙농(38%)도 꾸준한 증가추세
 - 한육우 분야는 '97년 정점을 기록한 후 위축되다가 최근 증가세로 전환('95년 대비 63% 증가)
- 생산액 기준 농림업 10대 주요품목의 대부분을 축산물이 차지
 - ①쌀 ②돼지 ③한육우 ④우유 ⑤계란 ⑥건고추 ⑦닭 ⑧수박 ⑨포도⑩딸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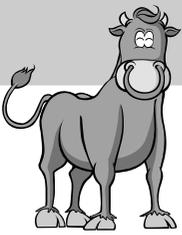


- 축산농가는 '90년대 중반이후 수입개방, IMF 경제위기 등을 겪으면서 전업화가 진전되고 젊은 경영주가 많음
 - 축산농가수(4대 축종, 비중): ('90)947천호(54.6%) ('95)792천호(52.8) ('04)333(26.8)
- 소득증대와 식생활의 고급화로 축산물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
 - 1인당 육류 소비량 : ('90) 19.9kg ('97) 29.3 ('04) 31.3
 - * EU국가 87kg, 미국 72, 호주 66, 중국 36, 일본 34 ('01년 기준)
 - 1인당 우유·유제품 소비량 : ('90) 42.8kg ('97) 52.1 ('04) 63.7
 - * 시유 소비는 최근 감소 추세, 치즈·버터·발효유 등 가공품은 증가 추세
- UR타결 이후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육류 자급률은 하락 추세
 - 생산량('95 '04) : 쇠고기 155천톤 145, 돼지고기 625 744
 - 자급률('95 '04) : 쇠고기 51.3% 44.2, 돼지고기 94.5% 84.9%

나. 그간 축산정책 추진 실적

- 그간 UR타결과 WTO체제 출범 이후의 축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규모화, 시설 현대화, 품질고급화 등에 중점 지원
- 그 결과 축산농가 전업화 촉진, 고품질·안전 축산물 생산확대, 방역체계 조직화 등 성과 거양
 - 한우, 양돈, 양계, 젓소 전 축종에서 규모화·전업화가 빠르게 진행





축종별 전업농 현황('95 → '04.12)

축종	전업농 농가수(비중)	전업농 사육규모(비중)
한육우	2,458호(0.5%) ⇨ 5,483(2.9)	206천두(8%) ⇨ 551(33.1)
젖소	1,325호(5.6%) ⇨ 4,501(46.8)	98천두(17.7%) ⇨ 344(69.2)
돼지	1,113호(2.4%) ⇨ 2,868(21.6)	2,360천두(36.5%) ⇨ 6,706(75.3)
산란계	357호(12.5%) ⇨ 496(24.3)	23,515천수(50.8%) ⇨ 33,692(65.5)
육계	306호(12.0%) ⇨ 807(50.2)	12,518천수(37.8%) ⇨ 40,174(80.2)

* 전업농 : 한우 · 젖소 50두, 돼지 1천두, 닭 3만수 이상

- 축사시설 현대화, LPC* 건설(9개소) 등 H/W위주 집중투자
 - * LPC(Livestock Packing Center) : 축산물의 생산, 도축 · 가공, 유통, 판매를 일괄 처리하는 주체
- 가축개량, 등급판정사업 등을 통한 시장차별성 강화 및 고품질 축산물 공급 확대
 - 쇠고기1등급/돼지고기A등급 출현율 : ('95) 12.8/6.3% ('04) 35.9/38.1
-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(HACCP) 도입 등 위생 · 안전성 제고 기반 확충
 - HACCP 적용 도축장 : ('00) 10개소 ('04.12월 현재) 125
- 축산업등록제('02), 친환경 축산직불제('04) 등 축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 도입

다. 여건 변화 및 향후 과제

- DDA협상, FTA 확대 등으로 축산물 시장개방은 더욱 확대
 - 축산물 관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시장경쟁 심화가 불가피해질 것이며, 특히 관세율이 높은 품목은 영향이 클 전망
 - ※ '04년 관세율 : 쇠고기 40%, 냉동돈육 25, 냉동계육 20, 혼합분유 36, 전지.탈지 분유 176, 천연꿀 243
- 대내적으로는 축산물 안전성, 환경, 가축방역 등에 대한 관심 증대
 - 축산물 소비는 꾸준히 증가할 전망(KREI 추정 1인당 육류소비량 : '03년 33.3kg/인 '13년 39.2)분유 176, 천연꿀 243
 - 소비자들은 먹거리 선택에 있어서 품질 및 안전성을 최우선 고려
 - '00년 이후 교역 증대에 따라 경제적 피해가 막대한 악성가축질병 빈발

- 구제역('00년, '02년 발생) 4,400억원 피해, 조류인플루엔자('03년) 1,500억원 피해, 돼지콜레라('02년 재발) 518억원 피해
- 축산분뇨 발생량은 사육규모 확대에 따라 증가추세이나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저감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가
 - 연간 발생량('03년 기준) : 49,830천톤(1일 137천톤)
 - ※ 축종별 구성비 : 한우 15.8%, 젓소 17.3, 돼지 58.1, 닭 8.7
 - ※ 돼지분뇨 발생량 추이 : ('92) 17백만톤 ('97) 22 ('03) 29

◇ 여건변화에 맞춰 우리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

-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·차별성 및 안전성 제고,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체질 구축, 사전예방적 가축질병 방역체계 구축 등이 과제

2. 축산정책의 기본방향

- 고품질 우량 브랜드 중점 육성으로 축산물의 고급화·차별화
 - 종합자금 및 컨설팅을 브랜드 전업경영체에 중점 지원
 - 생산자, 가공 및 유통업체간 연계체계 구축 지원
- 사육에서 소비까지 안전관리 강화로 소비자 신뢰 확보
 - 농장 및 유통·판매 단계에 HACCP 도입
 - 도축·가공장에 HACCP를 정착, 축산물 유통단계에도 HACCP 도입
 - 농가·가공장·소비자 교육·홍보 강화 및 위생검사 확대
-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달성
 - 친환경직불, 분뇨자원화, 사료영양관리 등 자연순환체계 구축
 - 유기축산, 조방축산, 동물복지 등 축산 선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
 - 남은 논과 밭을 이용하여 조사료 생산기반을 대폭 확충



- 사전예방 중심의 선진화된 가축 방역체제 구축
 - 국경검역을 강화하여 구제역 등 악성 전염병의 국내유입을 차단
 - 농가 교육강화와 방역관련 규정의 엄격 적용으로 방역인식 제고
 - 지방 방역인력 확충과 민간방역시스템 구축으로 민간방역 활성화

- 생산자단체의 자율수급관리체제 구축 및 농가 경영 안정화
 - 축종별 의무자조금 조성으로 생산자 중심의 수급관리체제 정착
 - 가축공제를 대폭 확대 개편하여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도모

3. 주요 분야별 추진시책

가. 고품질 우량 브랜드 중점 육성

- 우수 브랜드 경영체 중심으로 축산농가를 결집시켜 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소득 안정 도모
 - 지역 축협, 영농조합법인 등이 중심이 되어 일정규모 이상 농가를 조직화하고 생산·판매 관련 브랜드규약 제정
 - 브랜드규약을 통해 브랜드 품질·안전성·기능성 등을 사전 검증
 - 지자체는 지역대학, 연구소, 농업기술센터 등과 지역클러스터를 형성하고 기술·경영 지원 등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
 - 품질균일화 등 일정요건을 갖춘 브랜드경영체는 종합자금방식으로 생산·유통자금을 우선 지원
 - 브랜드 경영체의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우수업체에 대해 전산시스템, 포장재, 컨설팅 자금 등 지원
 - 브랜드 사업 지원대상을 현재 한우, 돼지에서 육우, 닭고기까지 확대 추진

- 전문화된 브랜드컨설팅 체계 구축
 - 농협중앙회 브랜드컨설팅 기능 강화 및 전문 컨설팅업체 육성
 - 컨설팅을 희망하는 브랜드경영체에 컨설팅자금 지원
 - 우수브랜드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스스로 진단·평가,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브랜드 경영지침 개발·보급

- 브랜드경영체와 백화점·대형유통업체의 연계체계 구축
 - 대형유통업체와 정례협의회를 통해 판로개척 지원
 - 브랜드육 우수판매업체에 시상 및 브랜드육 구매자금 지원
 - 브랜드활성화 심포지엄, 지역별 토론회개최로 분위기 확산
 - 브랜드화의 장점 및 성공사례 소개, 우수브랜드 발전방안 토의 등
 - 규모화된 브랜드를 중심으로 이력추적시스템 시범도입 추진

- 우수브랜드 선정, 홍보 강화
 - 소비자단체에서 “축산물브랜드 인증위원회”를 구성하여 우수 경영체 선정 등 추진
 - 브랜드의 일반적 요건 이외에 적정 분뇨처리 여부, 질병발생 상황, 잔류물질·미생물 위반여부 등도 인증기준에 반영
 - 선정된 브랜드에 대해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집중 홍보
 - 매년 인증 실시로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증을 취소하는 등 소비자 보호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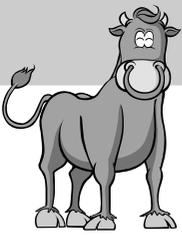
- 우수브랜드에 대한 홍보 강화
 - 브랜드경진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우수브랜드 정부 시상
 - 인증브랜드, 경진대회 시상브랜드 등 고품질 브랜드에 대해 TV 등 대중매체 이용한 집중홍보 실시

◎ 우량 브랜드 육성은 주요 축산과제 달성의 ‘전략적 축’

☞ 브랜드를 통해 고품질, 위생·안전성, 적정 분뇨처리·악취제거 등 친환경 축산, 질병방역 등을 효과적으로 달성

나.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로 소비자 신뢰 확보

- 사육단계 : 농가 교육 및 사료·동물약품 안전 관리 강화
 - 농가의 동물약품 오·남용 방지를 위한 교육·홍보 강화
 - 항생제 휴약기간 준수요령, 안전사용 규칙, 관련 법령 등
 - 항생제 등 잔류 허용기준 초과 농가에 대한 제재 강화



- 잔류검사 및 과태료 등 제재 강화로 동물약품 휴약기간 준수 유도
 - 후기사료 급여 의무화, 인센티브 부여 등 사료 관리 강화
 - 사료공장 HACCP 적용으로 사료 안전성 및 품질 향상 유도
 - 사료내 중금속, 살모넬라균, 항생제 등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
 - '05년부터 업체 자율적으로 HACCP을 적용하도록 하되 적용업체에 대해서는 사료 원료 구매자금 우선 지원, 연간 사료검사 면제, 농가 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
 - 축종별 농장단계 HACCP 지침 마련, '06년부터 시범 도입
- 도축·가공단계 : 미생물 등 검사 강화 및 HACCP 정착
- 도축장·가공장 잔류물질·미생물 검사 강화 및 결과 공표
 - 도축 검사관·도축검사원 확충('05년 100명)으로 도축검사 내실화
 - 도축장 HACCP운영수준평가제 시행을 통한 지원차별화
 - 분기별 평가 상위권 무이자, 중위권 3%, 하위권 자금지원 배제
 - 축산물가공장 HACCP 적용 확대 및 의무화 추진
 - HACCP 적용품목 확대(현 13품목), 적용시 시설자금 우선 지원
 - 집단급식에 우선 소비 요청 등을 통한 HACCP 제품 소비확대 유도
 - 닭·오리고기 지육·정육의 포장유통 의무화('07년부터) 추진
- 유통단계 : HACCP 도입 및 위생 감시 강화
- 보관·운반·판매업소에 HACCP 적용
 - HACCP 모델 개발('05년)·보급 및 적용 작업장 단계적 확대
 - HACCP 적용 작업장에 대해 위생검사 및 출입검사 면제, 시설 현대화 자금 우선 지원
 - 유통중인 축산물 수거검사 강화
 - 유통단계별 미생물 오염 모니터링 실시 후 그 결과를 환류
 - 재래시장 등 축산물 위생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 강화
 - 업소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(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)
- 판매단계 : 식육판매업소 신규개설 자격 제한, 정보제공 확대

○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식육판매업소 신규개설을 허용하는 방안 도입('07년)

- 기존 영업자는 영업 계속 허용(사례 : 부동산 공인중개사 제도)

* 일본, 유럽 등 선진국은 식육판매점 허가제 운영, 자격증 소지자만 영업

○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 도입 추진(보건복지부와 협조)

○ 축산식품 안전 관련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 소비자 등 참여 확대

- 명예감시원을 소비자 중심에서 생산자단체까지 포함하여 대폭 증원

□ 수입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

○ 수출 상대국 작업장 점검 및 국내 유통단계에서 수거 검사 강화

○ 축산물 수입판매업 신고 접수기관을 지자체에서 검역원으로 전환 추진

□ 신종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

○ 유해물질 위해평가 및 허용기준 신설·개선 등 관리 강화

○ 병원성미생물, 신종 유해물질 등 신속검사법 개발

다. 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 축산시스템 구축

□ 축산분뇨 발생량 감축 등 환경부하를 경감

○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도입('07년) 및 적정 사육두수 유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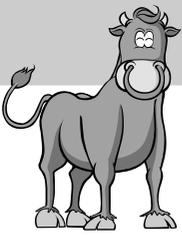
- 양분총량제 : 질소, 인산, 칼리 등 양분 잉여도가 높은 지역은 차년도 양분 총량 감축목표 제시 및 이행여부 평가(양분 과다지역은 축산관련 정책 지원 축소 또는 중단)

○ 지역별 양분총량제 시행 후 가축분뇨에 의한 문제 지속시 [가축사육두수 총량제] 도입 검토('11년)

○ 밀집사육 지역내 농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친환경 축사 신축을 지원('05 ~ '07년간 6개소 시범 실시)

□ 자원순환형 축산분뇨처리체계 구축

○ 경종·축산농가 연계를 통한 축산분뇨의 자원순환 촉진



- 퇴비 판매가격 차손보전 확대 및 액비 차손보전 추진
- 경종농가에 액비저장조 설치 및 축분 비료유통센타 지원 확대
- 축산분뇨 대량수요처 확보 및 액비화 등 기술개발 촉진
 - 간척지 등 대규모 사료작물재배지를 조성하여 액비 수요처 확보
 - 다양한 농축액비 개발, 기능성 퇴비·액비 유통제도 개선 등 기반 확충
- 축산분뇨의 퇴·액비의 품질 향상 및 연구·개발 강화
 - 발효축진제 등을 이용한 가축분뇨 악취 저감 방안 등 연구
- 조사료 생산·이용 활성화로 축산·경종 연계 강화
 - 남는 논과 밭을 이용한 사료작물재배단지 조성 확대
 - 지역여건에 적합한 종자·비료(퇴비) 지원 및 기술지도
 - 생산조정, 휴경지 등을 이용하여 사료작물 재배지 최대 확보
 - 경종농가와 연계한 사료용 총체보리 생산확대 및 총체벼 생산 추진
 - 추진계획 : ('03) 859ha ('08) 3,500 ('13) 5,000
 - 농·축협 등 조사료 연결체를 육성하여 조사료 생산 활성화
 - 연결체에 조사료 수확·운반 장비 등 지원
 - * 연결체가 경종·축산농가와 총체보리·벼 재배·공급계약 체결, 수확, 곤포사일리지 제조 및 축산농가 운반까지 책임
- 유기축산업 기반 구축
 - '03~'05 시범사업을 토대로 한국형 유기축산 모델 개발
 - 생산기술·지침서를 보급하고 시범사업장을 현장교육장으로 활용
 - 국내 유기 조사료 및 배합사료 생산기반 구축 유도
- 동물복지 고려하는 가축 사육환경 조성 추진
 - 가축사육·수송·도축·살처분 등 관련 동물복지 규정 마련
 - 가축사육시 일정한 복지기준 준수시 보상 지불제 도입
- 친환경축산 직접직불제·축산업등록제 등 정착·활성화
 - 친환경축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농가에 소득감소분 일부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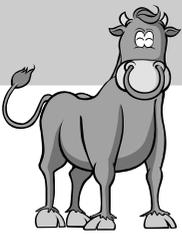
- * 소 : 초지 · 사료포 확보 등 조사료 자원확보 및 토양 환원
- * 돼지 · 닭 : 사육밀도 완화, 분뇨 발생량 감축 및 자원화
- * 공통 : 분뇨처리 경로 확인, 친환경 프로그램 이행기록 등
 - 시범사업 실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연차별 확대 추진
-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을 등록('05년말까지), 환경부하 저감뿐만 아니라 가축 방역 효율화, 이력추적시스템 도입 등에 기여
 - 축산업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농가정보 등을 체계적 관리
- ※ 네덜란드는 농가별 분뇨발생 허용량 제한, 벨기에는 농가별 사육두수 상한제정, 프랑스는 대규모 농장허가제 운영

라. 가축개량의 활성화

- 중장기 국가단위 가축개량 목표를 설정하고 우량 종축검정 · 선발, 계획교배 등 체계적인 가축개량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
- 한우 · 젓소의 경우 축발기금에서 개량 및 검정, 정액보급 지원
 - 보증씨수소를 선발, 우량 소 정액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
 - 한국형 보증씨수소 선발(연간) : 한우 20두, 젓소 2~3두
 - 국내산 소 정액 공급계획 : ('05) 1,850천str(한우 1,410, 젓소 440)
 - 가축 능력검정사업을 통해 유전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 이용
- *가축개량 관련 기금예산 : ('03) 275억원 ('04) 223 ('05p) 275
- 돼지 · 닭에 대해서는 민간업체에서 종축개량 및 검정사업 실시
 - 종축관련 업체수 : 종돈업 134개소, 종계업 269, 부화업 175, 정액처리업 57, 가축인공수정소 1,467

가축개량 주요 성과 및 목표

지표	'95		'04		목표('10)
한우 18개월 체중(비거세)	491kg	⇒	542	⇒	610
젓소산유량(305일)	5,836kg		8,019		8,500
돼지 사료요구량	2.39kg		2.16		2.10
산란계 연간산란수	286개		297		303



- 가축개량사업소에서 저가로 정액을 공급함에 따라 결손이 누적되어 축발기금 부담 증가(결손액 : '02년 60억, '03년 59억)
 - 정액 평균단가('04) : 한우는 4,272원/str(생산비의 82%), 젖소는 6,472원/str(생산비의 54%)에 공급

- 개량대상 가축을 소·돼지·닭 중심에서 오리·염소·사슴을 추가 지정하여 혈통 관리 및 검정 필요

- 한우 개량농가를 이용한 씨수소 및 고능력 암소 선발체계 구축
 - 한우 육종농가를 지원하여 보증씨수소 선발
 - 육종농가 : ('05) 10농가, 1,000두 ('08목표) 40농가 4,000두
 - 한우개량농가의 등록우 적정두수 유지 및 관리 내실화
 - 관리목표 : ('04) 82천두 ('05) 80천두 ('06) 80천두

- 유우군 검정 확대 및 젖소 수정란 이식을 통한 개량 촉진
 - 자율적 참여 유도로 검정률 제고 : ('04) 63% ('13) 70%
 - 수입 중단에 따른 수정란 이식을 통한 젖소 후보씨수소 생산(연 20두)

- 종돈업 등록제의 조기 정착 및 종돈·종계 검정시설 확충
 - 종돈업의 등록제 전환('03.1) 후 씨돼지 분양시 혈통서 발급 의무화
 - 종돈검정소를 청정지역으로 이전 검토(각 1개소)
 - 물돼지(PSE) 발생 방지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종돈 유전자(PSS) 검사 실시 : ('04) 5천두, 43백만원 ('05) 5천두, 43백만원

- 오리의 개량대상 가축 추가 지정 및 법령개정 검토(상반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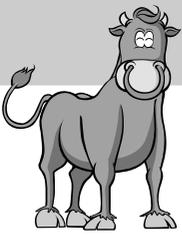
- 가축개량사업소의 기능 조정 및 운영 개선 방안 마련
 - 축발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의 전문성·독립성 및 효율성 제고

⇒ 한우 · 젓소 개량사업 개선대책 마련

마. 사전예방 위주의 선진 방역체계 구축

- ◇ 광우병 · 조류인플루엔자 : 발생국 수입금지정책 유지 등 유입차단
- ◇ 구제역 : 국경검역 · 소독 등 강화로 재발방지 최대한 노력
- ◇ 돼지콜레라 : 예방접종 강화 · 지속실시로 근절여건 조성
- ◇ 뉴캐슬 · 부루세라병 등 : 예방접종으로 발생 최소화

- 국경검역 활동 강화로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유입차단
 - 악성 가축전염병 위험지역 운항노선 · 출입국자 집중 관리
 - 육류 불법반입자 범칙금 처분, 검역탐지견 · 발판소독조 운영 강화
 - EU등 외국 동향을 파악, 검사기준 등을 국제기준과 조화
- 농가교육 · 혈청검사 확대 등 사전예방적 방역체제 구축
 - 소독요령, 예방접종, 의심가축 신고 등 농가 교육 확대
 - “전국 일제 소독의 날(매주 수요일)” 운영 내실화 및 공동방제단을 통해 고품 농가 등 취약 농장 소독 지원
 - 농장소독 · 예방접종 · 가축거래기록 유지 등 방역규정 이행확인 강화 및 위반농가 법적 처분 철저
 - 과태료 상향조정 (300 500만원이하), 살처분 보상 차등지원 등
 - 혈청검사 및 예찰 강화로 질병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
 - 종돈장 · 종계장 · 부화장, 양축농가 등에 대한 주기적 검진 강화
 - 폐사 가축 처리 철저 및 남은 음식물 가축급여 농가 특별 관리
 - 질병관리 등급제를 도입, 방역활동이 우수한 종돈장, 종계장이나 시 · 군 및 마을에 대해 무료 검진, 방역비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
 - ‘06년 종돈장에 우선 적용 후 ‘07년 시 · 군 단위로 확대



- 질병 발생시 초동방역 강화로 조기 종식 추진
 - 질병별 표준행동지침(SOP)에 따라 지자체 중심의 방역활동 전개
 - 유사시 신속 대응을 위해 지자체별 정례적인 CPX 실시
 - 주요 질병 발생능가는 과태료처분, 보상금 차등지급, 사육제한 등 처벌 강화
 - 방역소홀 지자체 제재 또는 불이익 조치강화로 참여 확산
 - 예방접종률 저조 등 방역 부진 지자체를 대외에 공포
 - 방역활동을 정기적으로 평가, 결과에 따라 축산사업비 차등 지원 등

- 조류인플루엔자 등 인수공통전염병의 인체 감염 예방관리 강화
 - 관계부처 합동 “인수공통전염병 대책위원회” 중심 범정부적 대응
 - 질병예찰, 방역정보의 공유, 공동 검증 및 홍보 활동 전개
 - 인체에 질병을 옮길 수 있는 버려진 동물의 적절한 관리
 - 지자체별 버려진 동물 보호시설 설치, 애완동물 등록제 도입 추진

- 중앙·지자체·방역본부·농가의 역할분담 및 협조체제 구축
 - 중앙 및 일선 방역 조직 및 인력 확충
 - 농림부 및 검역원 등 중앙방역조직 개편 및 기능 확충
 - 시·도, 가축위생시험소, 시·군의 방역 전문인력 확충
 - 공익수의사제 도입으로 부족한 현장 전문인력 확충
 - * 수의사가 일정기간 가축방역기관에 근무시 병역의무를 대체
 - 방역예산 지방비 부담비율 확대로 지자체 방역인식 제고
 - 방역본부의 인력·예산을 확충, 민간방역 기능 활성화
 - 시·군단위의 관련기관간 방역협의체 구성·운영 활성화

바. 소비자 지향적 선진 유통체계 구축

- 브랜드육, 포장육, 냉장육, 부분육 중심으로 유통체계로 개편
 - 브랜드경영체와 백화점 등 유통업체 연결 시스템 구축
 - 소 : 생산자 브랜드 활성화를 통한 생산·도축·가공·판매 일관화
 - 돼지·닭 : 생산 또는 유통브랜드를 통한 고품질화 및 일관생산체계 구축

- 도축장 HACCP 운영수준평가제를 통해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도축장이 시장에서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체계 확립

- 등급판정 확대, 부분육 유통 활성화 등을 통한 품질고급화

- 닭고기 · 계란 등급판정을 확대하고 소 도체등급기준을 개선하여 품질고급화 유도

- 쇠고기 부분육 상장경매 활성화 및 돼지고기에도 단계적 도입

- 돼지는 육량 위주 판정에서 육질을 고려하도록 판정기준 개정

-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등급판정 수수료 확대 등 제도 개선

- 식육거래기록의무제 정착 및 육류 이력추적시스템 도입

- 식육의 종류 · 원산지 등을 기록 보관토록 하는 식육거래기록의무제 정착

- 소비자가 육류의 이력(출하자, 사육지, 도축일, 등급 등)을 확인할 수 있는 추적시스템 도입

- 쇠고기 우수 브랜드를 대상으로 시범실시 후 단계적 확대 추진

- 수입 축산물의 둔갑판매 등 부정유통 방지

- 유전자(DNA) 감별법 적용 확대, 음식점원산지 표시 도입, 명예감시원 확대, 특별단속 등 원산지 단속 강화

사. 생산자 중심 수급관리체계 정착 및 경영 안정

- 자조금 활성화를 통한 소비홍보 및 자율 수급관리 체계 정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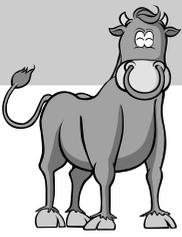
- 현재 임의자조금을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고 소비홍보 및 민간자율 수급조절 본격 추진

- 자조금 사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오리 등으로 확대 추진

- 자조금단체가 해당 축산물 소비촉진, 정보교환, 품질관리 등 이외에도 사전 · 사후적 수급관리기능을 수행

- ※ [축산물의 소비촉진등에 관한 법률] 시행('02.11) 이후 양돈분야에서 최초로 '04년부터 의무자조금 조성('04년 32억원 조성)

- 자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



- 대의원의 총수, 수납기관의 수수료 조정 등

□ 전업화에 따른 경영위험의 사전예방 및 경영회생 지원

- 전업농의 경영위험 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컨설팅 지원 및 농가 회계교육, 위험 관리 등 지원
- 경영장부 기록 유지 · 관리 농가에 정책자금 등 우대 조치
- 농가 경영평가를 통한 선별적 회생지원(work-out방식)
 - 부실경영체는 퇴출하고 회생 가능한 경영체를 중점 지원

□ 자연재해, 사고 등 경영위험에 대비한 가축공제사업 활성화

- 가축공제사업 대폭 확대 · 개편
 - 가입대상 축종을 확대하고 보장범위도 법정 전염병 등으로 확대
 - 질병발생시 경영손실보상 등 다양한 상품개발로 농가경영 안정화
 - 민간보험사 참여 유도로 공제료 인하와 보장수준 확대 유도

